

출제유형분석

총론	6	재무행정론	4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3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3	지방행정론	3

01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능률성(efficiency)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③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성(overlapping)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합리성을 목표와 행위를 연결하는 기술적·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 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 ① [O]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② [O] 대응성이란 정치·행정체제가 환경의 요구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③ [X] 가외성에서 중첩성이란 기능이 기관별로 배타적이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는 반복성(Duplication)이다.
- ④ [O] 사이먼은 실질적 합리성(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구분하였다.
- ⑤ [O] 과정설은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의 도출을 중시하므로 실질적으로 과정, 제도, 절차적 국면을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80, 88, 90, 94

▶ ③

02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 간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 ②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④ 업무와 상호의존성이 갈등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⑤ 지위부조화는 행동주체 간의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해설

- ① [X] 구조의 분화를 통해 조직 내의 계층 수,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견제하는 것은 집단 간 갈등의 조성전략이다.
- ② [O] 갈등관의 행태론적 견해는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 현상이며, 갈등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갈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갈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O]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등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④ [O] 직무와 책임의 분할이 심한 경우 의견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높은 상호의존성과 모호한 책임등은 갈등상황을 만들 수 있다.
- ⑤ [O] 조직 내에서 직위에 의한 지위와 능력에 의한 지위가 괴리되는 지위부조화는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92~394

▶ ①

03 공무원 징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는 것이다.
 ㄴ.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ㄷ.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ㄹ. 징계에 대한 불복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평정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 [X] 강임이 아닌 강등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ㄴ [X] 해당사유는 직권면직의 대상이다.

동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ㄷ [X]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

동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ㄹ [O]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근평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36~540

▶ ④

④ [O] 예산관리기능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책임, 예산 결정권의 소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계획책임, 결정권은 분산적이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현대 정부의 관리기능을 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예산과정의 지출통제기술은 정착되었다고 보고 관리의 효율화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진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제도가 확립되기를 원했고, 이를 통틀어 관리기능에 있어 집권화를 추구한다고 본 것이다.

⑤ [X]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한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LIBS)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37

▶ ⑤

06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 ㄴ. 바흐라흐(Bachrach)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원론에 해당한다.
- ㄷ.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 ㄹ.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 ㅁ. 다원주의는 사회중심적 접근법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해설 ㄱ [O] 다원주의에서는 소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정책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여러 경쟁이익집단 간의 협상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물이 정책이라고 본다.

ㄴ [X]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이론이다.

ㄷ [X] 밀스의 지위접근법이 아니라 헌터의 명성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둘 다 엘리트 이론에 해당하지만, 밀스의 지위접근법은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ㄹ [O]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ㅁ [O] 다원주의론, 엘리트이론, 마르크스이론은 사회중심적(society centered) 접근방법에 해당하며, 조합주의이론은 국가중심적(state centered) 접근방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187~189

▶ ③

07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 ②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 ⑤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하며,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해설 ⑤ [×] 행정재량권을 보다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복잡하고, 다원적인 행정책임)을 더 중시한다.

Ⅰ 전통 행정이론 vs 신공공관리론 vs 신공공서비스론

구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및 인식토대	• 초기 사회과학이론	• 신고전파 경제이론, 성과관리론	•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복합적
합리성과 인간행태	• 개괄적 합리성 •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 전략적 합리성 •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 이익의 총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대응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정부역할	• 노릇기(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둔 정책설계와 집행)	• 방향잡기 (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집단이익의 협상과 중재)
책임성 확보	• 위계적	• 시장지향적	• 다면적
행정재량	• 공무원에게 제한된 재량 허용	•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재량	•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조직구조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	• 분권화된 조직	• 리더십이 공유되는 협동적 조직
동기유발	• 보수와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정신	• 사회봉사, 사회이익에 기여하려는 욕구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67, 168



08 다음 중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회계 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
- ③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해설 ① [×]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회계 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

동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⑤ [O] 특별회계는 단일성,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운용에 있어 신축성이 높다.
- ④ [O] 특별회계는 별도 특정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한다.

동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566, 570



09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 ② 정부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③ 행태기준척도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 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이다.
- ④ 다면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게 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쉽다.
- ⑤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쇄적 착오라 한다.

해설 ① [X] 우리나라 공무원성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로 나누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③ [O] 행태기준척도법은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이다.
 ④ [O] 다면평가는 특정 피평가자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입체적·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수용성이 높아진다.
 ⑤ [O] 연쇄효과(헤일로 효과)는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오류를 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75, 478, 481



10 다음 <보기> 의 지방세 중 자치구세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재산세	ㄴ. 주민세
ㄷ. 지방소득세	ㄹ. 등록면허세
ㅁ. 담배소비세	ㅂ. 레저세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해설 ㄱ, ㄹ [O] 지방세 중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Ⅰ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세	도 세	자치구세	시·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801

▶ ②

1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적 시각을 반영한다.
- ②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 ③ 국 단위기구까지 자율성이 인정된다.
- ④ 계급에 따른 인력 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 ⑤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해설 ①, ⑤ [O]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강화되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라는 부분은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을 반영한다.
 ② [O] 무분별한 증원과 상위직 증설로 직급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 수 있다.
 ③ [X] 국 단위 이상 기구(국 포함)는 대통령령(직제)에서 규정하되, 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은 각 부처가 정원 범위 내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것이다.
 ④ [O]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498

▶ ③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 ②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 ③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 ④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속한다.

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지방재정자립도이다.

- 해설**
- ①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증부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 ② [○] 국고보조금은 수직적 조정재원으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구역 외 확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방 간 재정격차는 심화될 수도 있다.
 - ③ [○]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일반재원이다.
 - ④ [○]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등을 의존재원으로 보아 산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자립도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여 재정자립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 ⑤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비교한 '재정력지수'를 사용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808, 812, 818

▶ ⑤

13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⑤ 소속의원의 사직허가

해설 ① [×] 주민투표실시의 청구권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각호 10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 [○] 지방자치법 제77조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자치론 p.770~773, 786

▶ ①

14 행정개혁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참여기회 제공
- ㄴ. 포괄적 개혁추진
- ㄷ. 구성원의 부담 최소화
- ㄹ. 외부집단에 의한 개혁추진
- ㅁ. 피개혁자 교육 및 홍보
- ㅂ. 개혁안의 명료화

- ① ㄱ, ㄴ, ㄷ, ㅁ
- ② ㄱ, ㄷ, ㅁ, ㅂ
- ③ ㄱ, ㄴ, ㄷ, ㅁ, ㅂ
- ④ ㄱ,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ㄱ, ㄷ, ㅁ, ㅂ [O]

ㄴ [X] 개혁에 대한 저항은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전반적(포괄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개혁은 절차, 수단, 방법 등에 있어 구체성을 가지고 부문적,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ㄹ [X] 외부집단에 의해 개혁이 추진될 경우 내부에 의한 개혁보다 조직 구성원의 더 큰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713, 714

▶ ②

15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 ② 공유재(common goods)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③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 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 ④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⑤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① [O] 의료, 교육과 같은 재화의 경우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이 가능하지만, 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

②, ⑤ [O]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ex. 연안어장, 녹지, 하천 등)

③ [X]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일정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 이용규칙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적합한 조직적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④ [O]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나 서비스 혜택으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고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재는 과소공급 또는 과잉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재를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겼을 경우에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소공급 될 여지가 더 크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32~34, 127

▶ ③

16 다음 중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설 ① [O]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O]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1항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O]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O]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X]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30, 31

▶ ⑤

17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으로부터 시작해 행동유형론을 거쳐 상황론으로 발전해 왔다.
-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보수적·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③ 하우스(House)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를 지원적

리더라고 하였다.

- ④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중 형식적 사고와 관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촉매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⑤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에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 척도’(LPC : Least Preferred Coworker)를 사용하는데, LPC 점수가 낮은 경우 과업지향형으로 구분한다.

- 해설**
- ① [O] 리더십이론은 속성(특성, 자질)론에서 행태론(행동유형론), 상황론으로 발전해왔다.
 - ② [O] 거래적 리더십은 안전지향의 폐쇄적 환경에 어울리는 리더십으로 보수적이며, 현상유지적이다.
 - ③ [X]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지시적, 지원적(지지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등 4가지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하가 과업 목표, 계획,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과업과 그들에 대한 역할기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은 참여적 리더십(지원적×)이다.
 - ④ [O]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 사고와 관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지적 자극이다. 촉매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서의 지적 자극을 촉진시키는 리더십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80~387

▶ ③

18 다음 중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예산제도는 구체적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② 계속비 제도는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③ 이월제도는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겨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④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제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획재정 부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 ⑤ 수입대체경비는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을 반납하는 것이다.

- 해설**
- ①, ②, ③, ④ [O] 총괄예산제도, 계속비 제도, 이월제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⑤ [X] 수입대체경비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08~610, 616

▶ ⑤

19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 ②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선택의 제약을 인정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 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

과물로 본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 해설** ① [○] 신제도론에서 제도는 비공식적·규범·규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② [○] 제도가 개인을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와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중시한다.
 ③ [○]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형성된 제도는 지속성과 경로의존성을 갖고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것으로 본다.
 ④ [×]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다.
 ⑤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고, 제도란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33~138

▶ ④

20 다음 중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의 일종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아이디어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아이디어 평가는 첫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④ 아이디어 개발단계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분위기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⑤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해설** ①, ②, ③, ④ [○] 브레인스토밍은 직접적·대면적 접촉을 유지하되, 즉흥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조직구성원 및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인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다.
 ⑤ [×] 아이디어의 개발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은 평가와 비판,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23

▶ ⑤

21 다음 중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 3.0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②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일방향 서비스 제공
 ③ 민관협치 강화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⑤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

- 해설** ②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주도의 일방향 정보 제공은 1995~2000년의 정부 1.0 의 내용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지향

	1995~2000년	2005~2010년	2015~2020년
구분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World Wide Web	Web 2.0	Real-World Web
접근성	정부중심	시민중심	개인중심
	• First Stop Shop • 단일 창구(포털)	• One Stop Shop • 정부서비스 중개 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t • 개인별 정부서비스 포털
서비스	일방향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공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 위주의 서비스 서비스 전자화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 융합서비스 신규서비스 가치 창출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유선 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기기 통합(채널 통합)
업무 통합	단위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 (공공·민간 협업)	서비스 통합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화사회와 행정 p.684

▶ ②

22 다음 중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자의 전문성, 사기,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 집행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②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도력은 정책집행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③ 정책집행은 대상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활동이 다양한 경우 더욱 용이하다.
- ④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책집행 체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지체된다.
- ⑤ 집행효율성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높아질 수 있다.

해설 ③ [×]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므로 정책집행의 대상범위가 넓을수록 정책 내용을 실현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68~270

▶ ③

23 다음 중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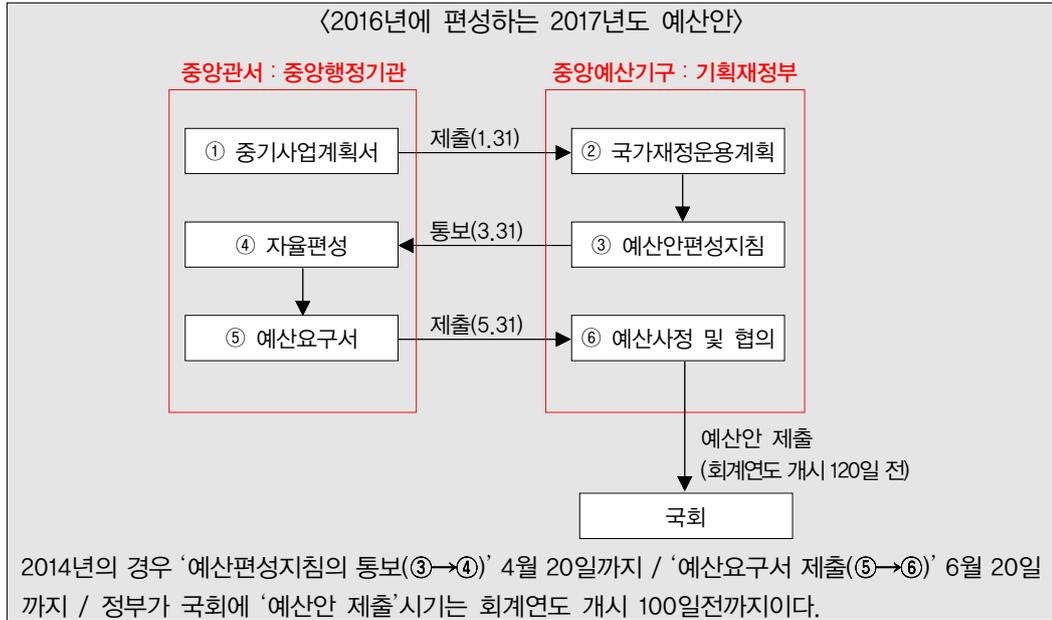
- ①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②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2016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2106년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③, ⑤ [O]

- ④ [X] 2016년에 편성하는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599

▶ ④

24 다음 중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 ②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 ③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 ④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예고제도 등이 있다.
- 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내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 해설**
- ① [X] 역선택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으로 부적격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사전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포획현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다.
 - ② [X] 도덕적해이가 아닌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 ③ [X] 역선택보다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⑤ [X]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은 내부적으로 주인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므로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외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I 주인-대리인 이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개인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 방법론적 개체주의, 경제학적 관점의 미시주의적 접근
주인-대리인의 계약관계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의 계약관계로 상정 ① 국민(주인) ⇔ 의회(대리인), ② 의회(주인) ⇔ 정부(대리인)
비대칭적 정보와 기회주의적 속성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불완전정보와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 존재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적인 상황인 경우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게 됨.
대리손실의 발생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 ① 역선택 : 계약 전 감춰진 특성으로 부적격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사전 손실 ② 도덕적 해이 : 계약 후 대리인이 권력남용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후손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39

▶ ④

25 다음 중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초합리적인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 ②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 ④ 목표와 수단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정치적 지지와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이상적인 상태를 고려한 최상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 해설**
- ① [×]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② [○] 혼합모형(혼합주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⑤ [×] 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38~246

▶ ②